

# 추징금 867억 환수 '답보'...5·18 헌법전문 수록 '잠잠'

## 전두환 사망 3년... 잊혀져가는 과제들

5·18 광주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씨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과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전씨가 2021년 11월 23일 숨지면서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5·18 헌법수록, 5·18 왜곡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씨의 손자인 전우원씨의 폭로로 재조명 된 전씨 일가 등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답보 상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867억원은 미환수 상태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2020년 발의된 '전두환 추징 3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추징 3법은 사망한 추징금 미납자의 상속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며 몰수 대상물건 외 재산까지 확대한다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 '전두환 추징 3법' 자동 폐기 후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 발의 중 왜곡방지법에도 왜곡·편향 계속 핵심과제 진상규명 진전 없고 '전두환 범종' 반환도 지지부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18 진실 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국가공인 5·18 진상보고서가 나왔지만, 최초 발표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지 확인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

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직권조사 과제 17건 중 발표명령자, 암매장·행불자 등 6건을 조사 미진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최초 집단발포와 관련해서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뒷선으로부터 발표 지시를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정작 '뒷선'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새로운 암매장지나 유해를 발굴하지도 못했고, 무연고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도 찾지 못했다.

5·18 헌법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음에도 37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쓰인 헌법의 '서문'(序文)으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는 문구다. 문재인 전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정치권도 동조했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5·18왜곡·편향은 5·18왜곡방지법을 제정한 이후로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올 한 해만 인터넷 신문 기자와 민경욱·이영일 전 국회의원,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 보수 논객 지만원씨,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개인 8명(중복 포함)과 2개 정당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최근光山구 무진대로, 서구 광주시청 등 광주 곳곳에 '5·18은 북한 소행이다' 등 내용의 5·18 왜곡 현수막이 버젓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5·18기념재단이 최근 5년간 네이버 포털 뉴스콘텐츠 제휴 28개 언론사의 5·18 관련 뉴스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댓글 2만 5035건 중 6417건(26.63%)이 5·18을 왜곡·편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을 대상으로 '5·18 편향 금지' 조항을 추가했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에 원점으로 돌리기도 했다.

광주·전남 곳곳에는 청산되지 않은 전씨의 잔재

도 남아 있다.

장성군 상무대에 있는 군(軍) 법당 무각사에 남아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이 대표적이다. 전씨가 5·18 직후인 1981년 광주시에 있던 상무대를 방문하면서 군 법당 법무사(현 무각사)에 기증한 범종으로, '상무대 호국의 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 등 문구가 쓰여 있다.

범종은 지난 2003년 존재가 알려진 이후 2006년 상무지구 무각사에서 장성 상무대 무각사로 옮겨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두환 범종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반대로 10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환 여론이 들끓었던 2019년 이후로는 광주시, 5·18기념재단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장성 무각사 관계자는 "불자들이 돈을 모아 시주한 범종이고,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다 군 재산으로도 묶여 있어 처분이 어렵다"며 "범종은 광주시에 반환하지 않고 무각사 내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투자 리딩방' 11억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 목포경찰, 18명 적발·5명 구속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1억 여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청 조직폭력배 소속 20대 2명을 비롯한 18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해 소위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24명에 게 11억 6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나 문자, 전화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종목을 추천하고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트에 표시된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알려주고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안심시킨 뒤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출책, 중간관리책, 범죄수입금 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의 주거지가 목포의 한 아파트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모잠택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 역시 폭력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추적하는 한편,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뿐 아니라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젊은층까지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항상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2024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21일 광주시 동구 장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일대에서 열렸다. 광주동부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발생을 가정해 질식사화 덮개와 임시수조를 설치하고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 심장 수술 후 식물인간... 법원 "병원 측 책임...2억 지급" 판결

의료진의 검사·조치 소홀로 환자가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인 끝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 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타인 얼굴에 두꺼비 합성 영상... 모욕죄로 실형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31일 확정했다.

모욕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

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타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